청와대 참모·친명계 전면 배치… 李, 친정 체제 '굳히기'

청와대 출신 3명 내각 입성
외교안보 전면 교체·측근 기용
국민의힘, '회전문 인사'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측근을 전진 배치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친정 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부처에 청와대 참모 출신 3명이 포진하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을 산하에 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여기에 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하면 수사와 기소를 관할하는 부처 수장이 모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내년이면 햇수로 집권 3년 차인 상황에서 친정 체제를 통해 국정 과제에 속도를 높이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연말은 '청문 정국'으로 술렁일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23일) 지명한 국가정보원장과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이 청와대 출신이다. 임웅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고, 강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청와대 수석대변인이다. 홍익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참모 3명이 한꺼번에 내각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강금실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강 후보자는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후원회장, 지난해 대선에선 선거대책본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강 후보자는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이끈 바 있어, 정보기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인선 이유다.

외교안보라인의 무게중심도 한미동맹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는 '동맹파'로 옮겨지면서, 이 대통령과 가까이 일한 이들이 발탁된 점이 특징이다. 지난 8월 개각 때 유임됐던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이번에 모두 교체됐고,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되던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함께 물러나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한미동맹을 재정비하면서 실용 외교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웅순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 곁에서 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며 한미 관세협상, 한일 셔틀외교 정착 등 성과를 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후보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참여정부 통일부 정책보좌관 등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정무수석으로서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점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한준호 의원을 발탁한 것도 이 대통령의 친정 체제 강화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대선 이 대통령 수행실장을 지낸 친명계 핵심으로, 한때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 주요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부처인 셈이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이미 이용철 후보자가 지명돼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성남시장직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한준호·이용철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수사(행안부)와 기소(법무부)의 두 축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최근 친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지방선거 경선에서 경쟁자인 점을 두고, 이번 인선이 일종의 '견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자체 관련 업무도 관할하는 부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인선 양상이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나 '성남라인' 등으로 '인재 풀'이 좁아진 모양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에 올해 연말에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외부 인재 수혈 없이 청와대 참모와 여당 핵심 인사를 부처 수장으로 기용하는 '회전문·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민석 취임 100일… 민주 갈등 봉합 '과제'

별도 간담회 없이 민생 행보
정청래 전 의원, 김민석 겨냥 SNS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돌봄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별도의 기자간담회 없이 당 유튜브 방송 출연과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김 대표는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 끝에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꺾고 당 대표 업무를 시작했으나,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선출되면서 순탄치 않은 100일을 보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출범시킨 '당원 조사 TF(태스크포스)'가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하자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연일 압박했다. 결국, 당원 조사 TF의 보고가 예정됐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분열주의·반(反)이재명'의 제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과 친청계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또한,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역구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란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하고, 윤리심판원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심의하면서 당내 갈등은 고조하고 있다.

김 대표도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의 갈등 상황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역시 소리가 나는 건 당에서 소리가 난다"면서 "소리가 나는 부분은 잘 풀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초반에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저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의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러 지표와 성과만큼 더 확 와닿을 체감 민생, 이것이 당이 노력해야 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법원장 탄핵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 가고 있는데, 내란 진압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완전 정리 단계의 일이기에 그로 인해 민생에 대한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용철 "국민 납득 못 할 일 안 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이용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권 오·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이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설'을 부인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청장을 지냈고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열을 올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탈옥 특검'을 발족하고 수사해서 몇 명이 기소되면, (그 때) 장관으로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 탈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특검의 출범 목적이 "검찰권 오·남용으로부터 불법적인 기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재차 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 중 12건이 이재맹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이라며 "권력 가진 사람이 이권을 가져간 사건이다. 일반 국민은 피해자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 코스닥 상장사 바이넥스 겸직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직원 감봉 처분 등을 거론하며 "준법의식과 이해충돌 개념이 없다"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왜 이 시점에 꼭 해야 하는가. 국민 보시기에 보은인사로 보고 공소취소에 적임자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저러한 법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여러 잘못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李,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검토

"행정력 총동원해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일정 기간은 다른 시험도 못 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능은 지났으나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단 하나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력을 겨루는 모든 시험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훔치는 것이고, 공정 경쟁이라는 공동체의 핵심 원리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범죄와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험 전반에 대한 범정부 합동 조사를 바탕으로 숨어 있던 부정행위를 밝혀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고 센터를 운영해 모든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존 시험과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이제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수호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